

지속가능 기업을 위한

공익신고의 중요성

강사 이재일



1

부패척결의 필요성

청렴도 제고

■ 우리는 왜 부패행위를 하는가

당신이 가까운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제한 속도 60km인 시내구간에서 친구는 80km로 과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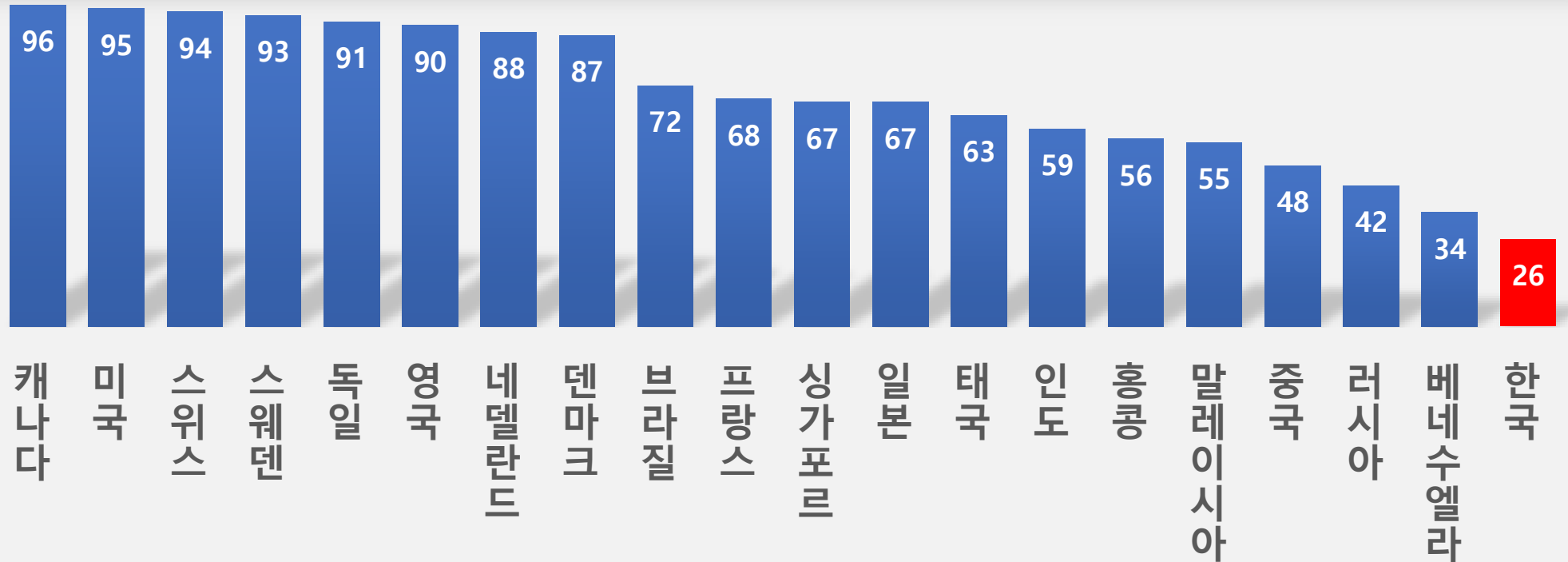
당시 속도 위반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친구 측 변호사가 만약 법정에서 친구가 60km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였다고 증언을 해주면 친구가 중한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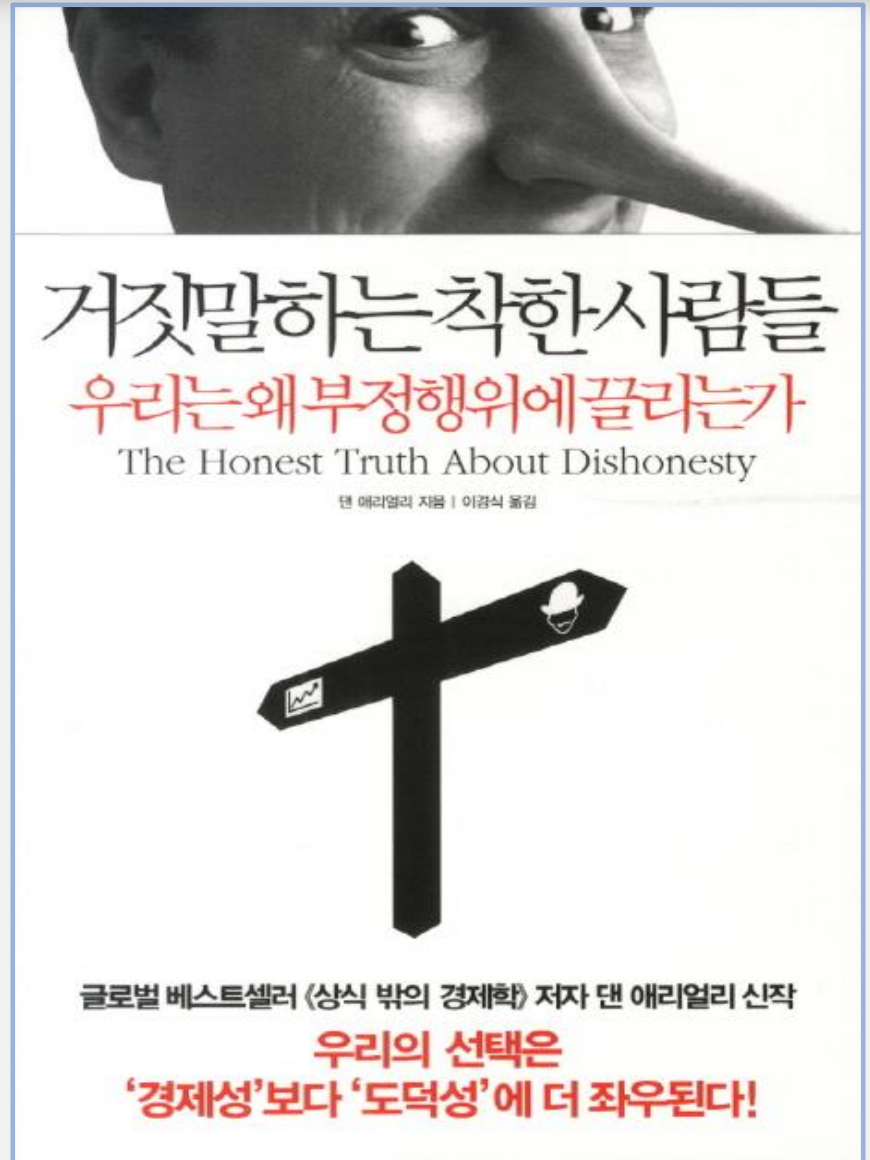
폰스 트롬펜아르 (Fons Trompenaars)의 책
보행자는 죽었는가? (Did the Pedestrian Die?)

■ 우리는 왜 부패행위를 하는가



- 네 명 중 세 명꼴은 **진실보다는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한다는 답변으로 꼴찌
- 한국 사회가 **진실보다도, 사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는 단면을 보여줌
- 사회적 규범, 공동체 사회의 이익이나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보다 가까운 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판사까지 속이는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패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 우리는 왜 부패행위를 하는가



■ 우리는 왜 부패행위를 하는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에 샐러드를 먹었기 때문에 열량 높은 쿠키 몇 개는 먹어도 괜찮겠지 생각한다.

택시기사들은 시각장애인보다 일반인을 태웠을 때 길을 우회하는 부정을 더 많이 저지른다. (길을 돌아가도 인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보다 일반인을 속이는 편이 죄의식이 적기 때문)

➤ 누구나 일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소한 부정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이든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을 한다.
큰 문제만 없다면 악의없는 거짓말이나 작은 부정을 하더라도 스스로는 착하다고 생각한다.

→ **자기합리화** (도덕적 이미지와 이기적인 욕망 사이에 균형찾기)

부패 개념

두산백과사전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

국제투명성기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
Corruption is 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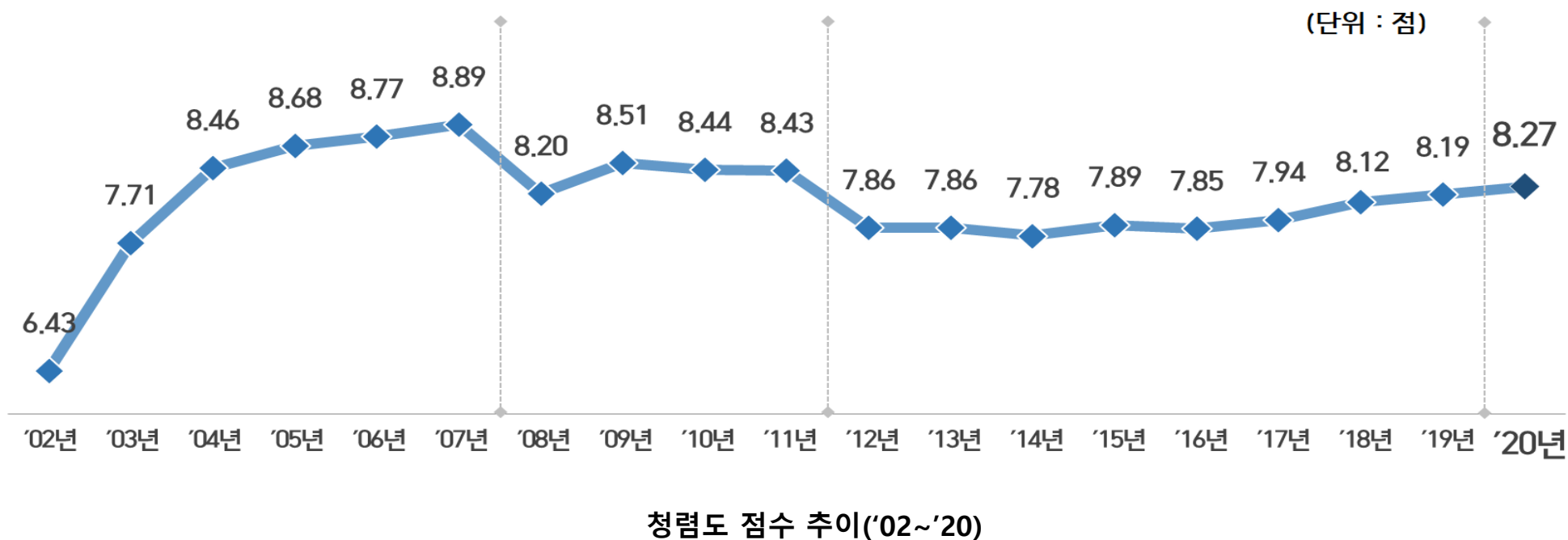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 부패 개념

뇌물, 독직, 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 : 공직자가 선택된 민간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베풀고, 민간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래의 형태 • 독직 :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의 보상을 요구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 • 강탈 : 뇌물과 반대로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을 위협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것
남용되는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권에 속하는 인허가, 조세, 조달, 인사, 수사는 대표적인 부패행위 또는 사적 이익의 유발요인 • 국회의 입법 활동은 활발한 로비의 대상이 되는데 로비의 대상인 재량권이 부패행위의 유발요인 • 사법부의 형사재판권이나 민사재판권도 같은 이유에서 로비의 대상이고 또한 부패행위의 유발요인
추구되는 사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 강탈, 독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우회적인 형태의 이득 • 금품 외의 방식의 보상 • 직무행위의 권한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의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
훼손되는 공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책정의 왜곡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 허가, 시공업체, 납품업체 선정의 왜곡에 따른 물적 자원 배분 왜곡 • 인사권의 남용에 따른 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 • 포상과 처벌의 왜곡에 따른 공정성 왜곡
조직화 · 구조화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경유착: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조직적인 부패행위 • 권력형 부패행위: 조직과 조직간의 유착은 흔히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발생 • 언론 부패행위: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는 언론기관이 편집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유인 • 의료 부패행위: 전문 처방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병원 또는 개인의 사익을 도모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27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08점 상승
- 외부청렴도 8.53점 (0.06점 상승)
내부청렴도 7.59점 (0.05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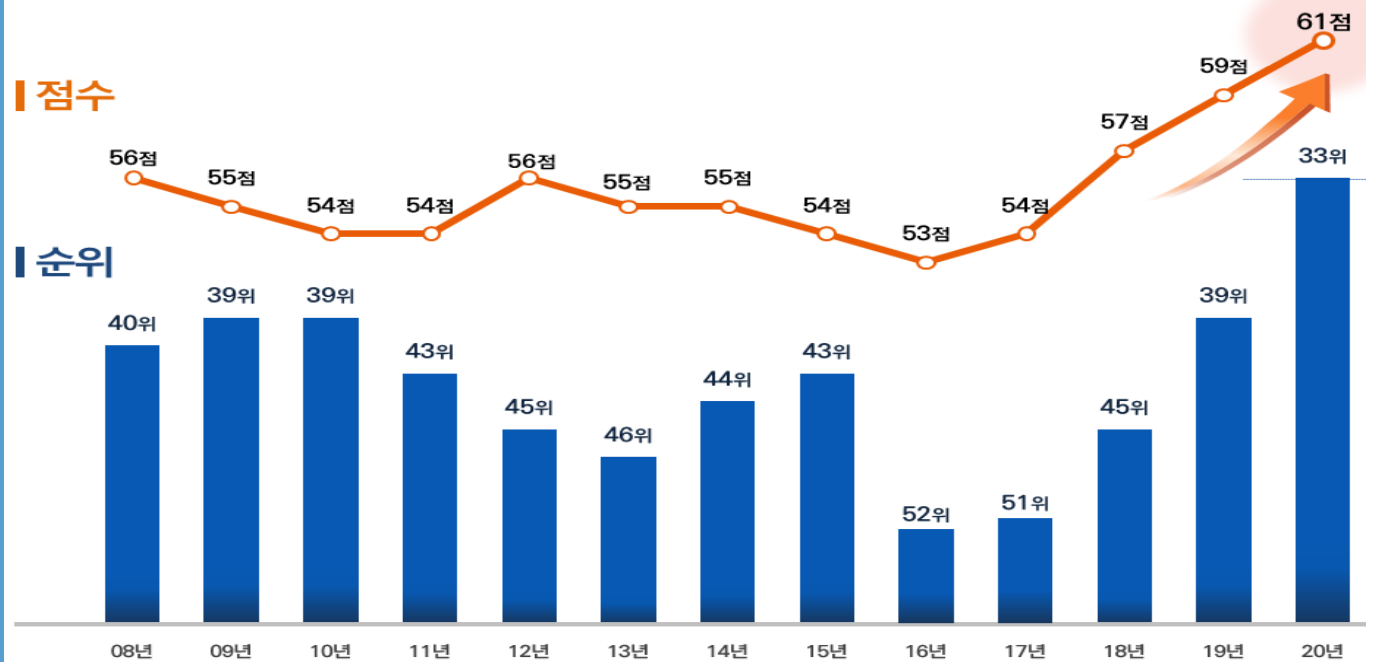
※ '08년, '12년, '20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순위



- OECD : 회원국 37 개국 중 23위
- OECD 평균 vs. 대한민국
EIU:공공자원관리 뇌물관행지수(-12.4점) / PERC전반적 부패수준(-13점)
- 부패인식지수(CPI) 10점 상승시
GDP 8조 5천억 증가, 매년 일자리 2만7천개 이상 창출, 4천억원의 세입 증가 (서울대학교, '17.12월)

청렴수준진단

-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국가 청렴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국민, 사회각계 등 각 부문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인식과 노력 요구

2021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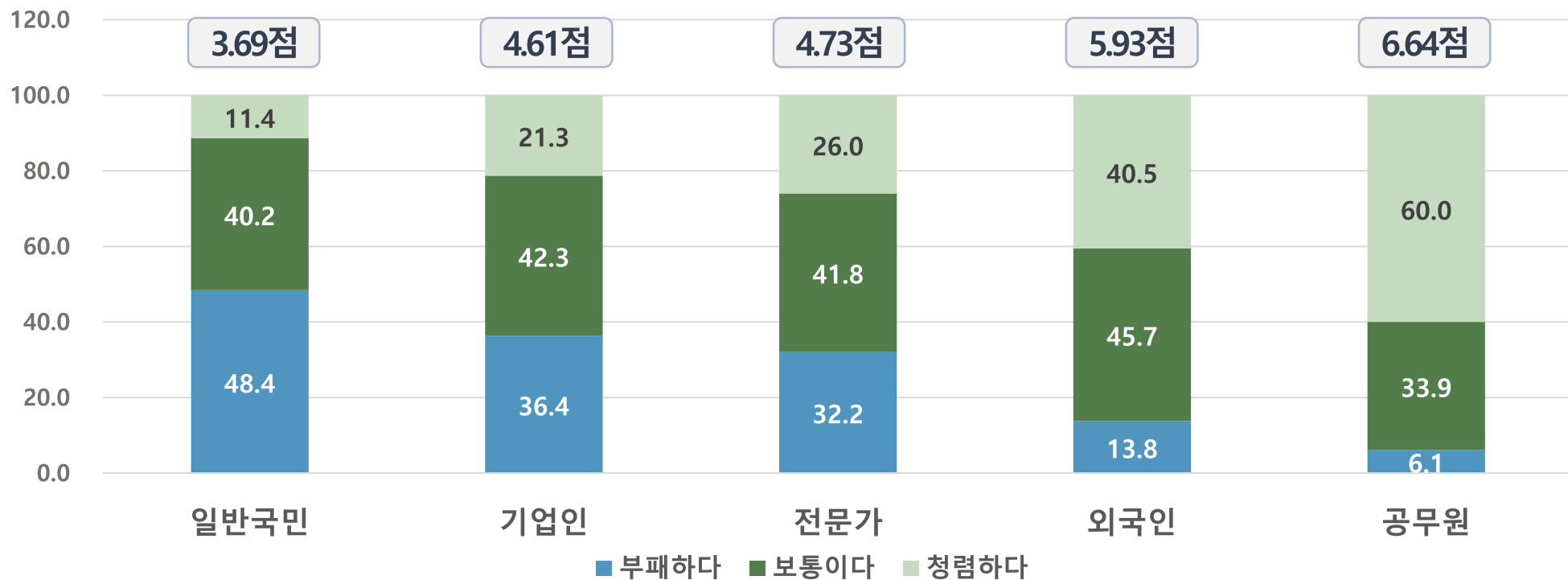
평가기구	분야	평가(2020)	평가(2021)	순위변경
IMD (국제경영개발원)	경제성과	27	18	↑ 9단계
	정부효율성	28	34	↓ 6단계
	기업효율성	28	27	↑ 1단계
	인프라	16	17	↓ 1단계
총 합		23	23	-



부패 인식 현황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인식

단위 :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은 조사대상별로 인식 차이 여전

일반국민은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는 응답이 11.4%인 반면, 공무원은 60.0%로 국민과 공무원간 인식의 괴리 존재

부패신고 필요성

부패는 개인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더 나아가 국가까지
파멸시키는 속성을 지닌다.

부패는 자본과 투자의 비용을 늘리며
민간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FDI)를 감소

부패는 다양한 경로(정부 수입 감소, 불필요한
물가 상승, 정부 효율성 감소, 기업 생산성 저하)
를 통해 성장을 저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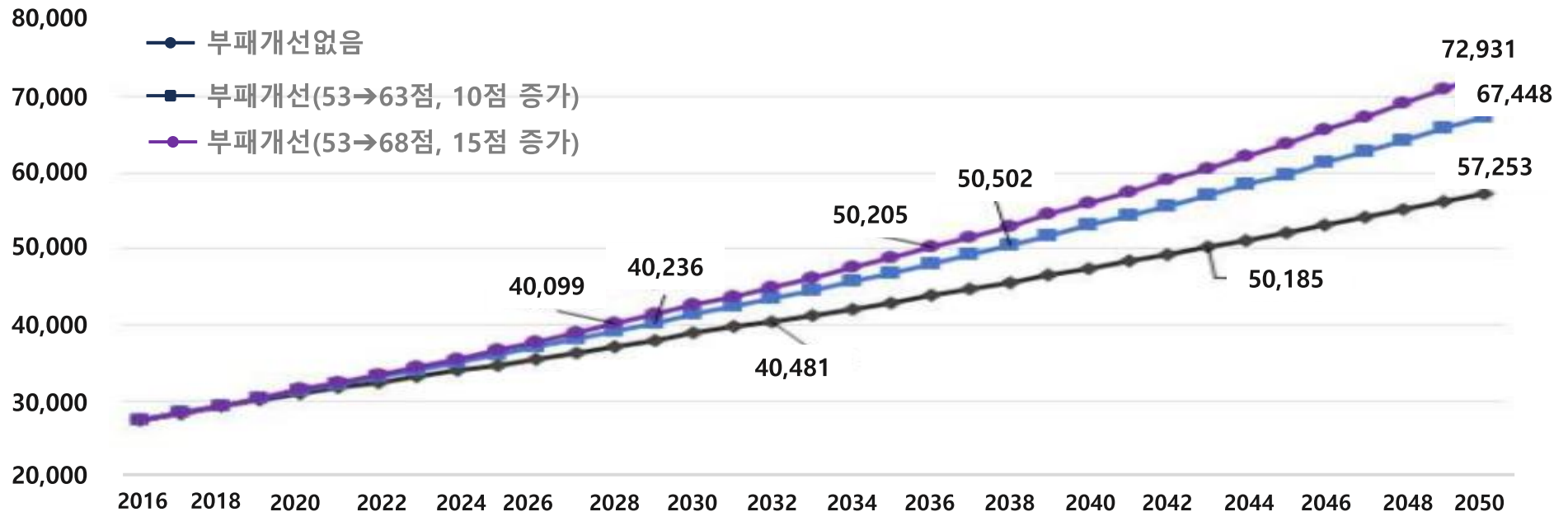
IMF의 "부패비용과 감소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부패비용은 연간 1.5-2조 달러로 GDP의 2%

부패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혁신을 저해함.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①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 ②경제활동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 부패 척결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함

CPI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관계

부패 개선 유무에 따른 한국 1인당 GDP 추이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CPI)를 10점 증가시키면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시기를 3년, 5만달러 달성 시기를 5년 앞당길 수 있다.



2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적 가치 경영의 대두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사회적 가치 경영 시스템 도입 필요

UN SDGs	유엔 지속가능발전(UN SDGs)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제시
ISO 37001	2016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가 부패 방지를 위해 각국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된 표준 가이드라인
ESG	환경과 사회책임, 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경영 시스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코로나 팬데믹 여파 의약품 유통 비대면 활동 대세
- 4차산업혁명시대 발맞춘 '스마트 영업'필요성 대두
-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한 경영리스크 증가
- 글로벌 차원의 반부패 관련 법규 적용 강화
 - 글로벌 경영의 보편화에 따른 역외적용원칙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대두
- 사회·경제 환경 변화로 양극화 심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 의약품 시장의 변화(리베이트 유형의 축소와 편법 영업)
- **산업계의 자정노력 강화**
 - 윤리강령 및 표준내규 제정
 -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개발 및 자율점검 실시
 -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및 CP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 윤리경영 워크숍 및 아카데미 정례화
 - 제약기업의 CP등급평가
 - 공정경쟁규약 기준 강화와 심의위원회 운영
- **제도의 변화**
 -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작성 및 보관 제도

부패의 다양화, 다각화

유형

✓ 뇌물, 독직, 강탈

- **뇌물**: 공직자가 선택된 민간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베풀고, 민간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래의 형태
- **독직**: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의 보상을 요구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
- **강탈**: 뇌물과 반대로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을 위협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것

✓ 남용되는 권한

- 행정권에 속하는 인허가, 조세, 조달, 인사, 수사는 대표적인 부패행위 또는 사적 이익의 유발요인
- 국회의 입법 활동은 활발한 로비의 대상이 되는데 로비의 대상인 재량권이 부패행위의 유발요인
- 사법부의 형사재판권이나 민사재판권도 같은 이유에서 로비의 대상이고 또한 부패행위의 유발요인

✓ 추구되는 사익

- 뇌물, 강탈, 독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우회적인 형태의 이득
- 금품 외의 방식의 보상
- 직무행위의 권한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의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

✓ 훼손되는 공익

- 가격책정의 왜곡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 허가, 시공업체, 납품업체 선정의 왜곡에 따른 물적 자원 배분 왜곡
- 인사권의 남용에 따른 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
- 포상과 처벌의 왜곡에 따른 공정성 왜곡

✓ 조직화·구조화 정도

- **정경유착**: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조직적인 부패행위
- **권력형 부패행위**: 조직과 조직간의 유착은 흔히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발생
- **언론 부패행위**: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는 언론기관이 편집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유인
- **의료 부패행위**: 전문 처방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병원 또는 개인의 사익을 도모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처분 현황
처분유형(품목수)

시행 연도	처분유형(품목수)					
	경고	과징금	약가인하	약가인하 및 경고	요양급여 적용정지	계
2015	3	0	40	0	0	43
2017	0	35	186	0	9	230
2018	0	0	306	34	0	340
2019	0	59	0	0	87	146
5년간	3	94	532	34	96	759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



미국 SEC 로고
[EPA=연합뉴스]

코로나 재택근무 여파 기업 내부고발 역대 최고

박현경 기자 입력 01.13.2021 04:24 AM 조회 6,509

지난해 미 기업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확산된 재택근무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작년 9월까지인 2020 회계연도에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접수한 기업 내부 고발 건수는 총 6천 900건으로 전년도보다 31%나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어제(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SEC 관리들은 내부 고발이 미 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대거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 관리자나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진 점도 내부 고발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SEC의 한 전직 간부는 전했다.

SEC의 포상금 제도 역시 내부고발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원인이다.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

공익신고 보상금 절반이 '리베이트 등 건강분야'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9.30 09:00 | 댓글 0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9년 101억원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신고자
·식품 등
를 차지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96억 4천만원 중 리베이트·사무장병원·식품 등 건강분야 보상액이 48억 6787만원으로 50.5%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 시행 성과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건강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지급건수는 총 6417건 중 4,320건으로 전체의 67.9%에 달했다.

건강분야 주요 공익신고 유형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다.

이외 공정한 경쟁 분야에도 제약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약회사 등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이다.

한편 공익신고 보호법 시행 9년간 보상금외 포상금 4억 7천만원을 포함 101억원이 지급됐으며 국가환수액은 1,370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 올해 11월 20일 부터는 제정 당시 180개 였던 대상법률이 467개로 대폭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

'리베이트' 제약사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2억7천만원

병·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2억7천40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6명에게 총 3억3천798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천만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

의약품 제조·품질 관련 불법행위 내부 고발 빗발

김용주 기자 | 입력 2021.05.17 12:50 | 수정 2021.05.18 07:25 | 댓글 0



클린 신고센터에 접수 줄이어...식약처 고발내용 검토후 실제 조사 착수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제조 품질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4월부터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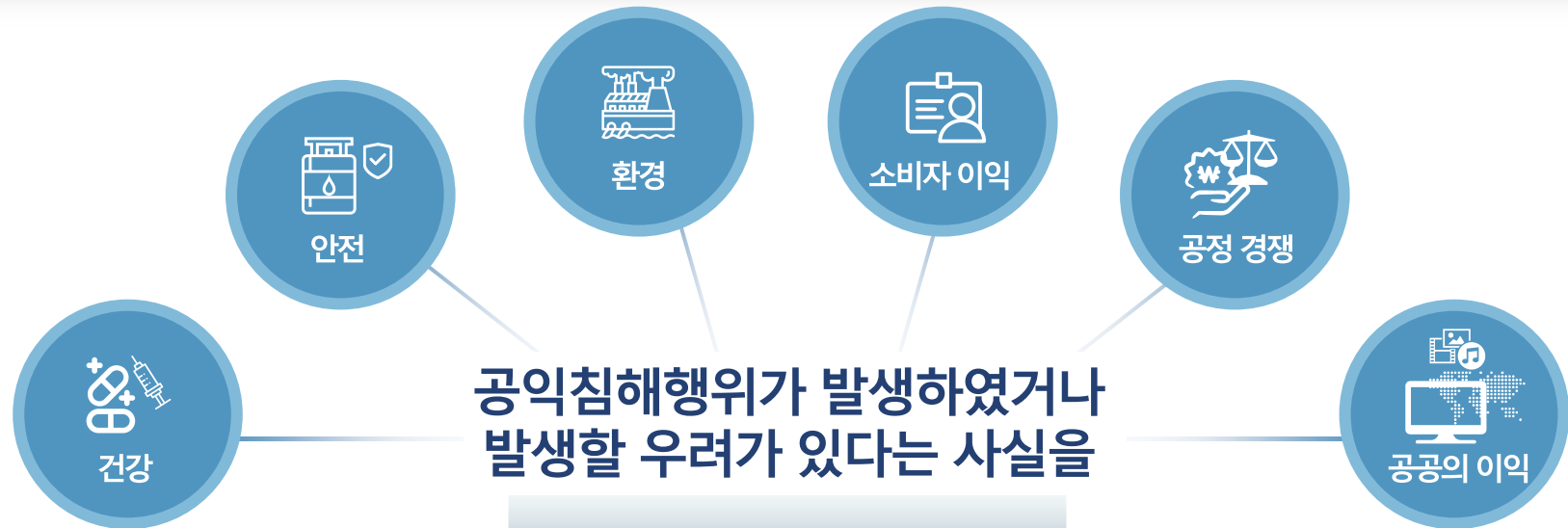
식약처는 클린 신고센터를 통해서 △의약품 허가(신고) 사항과 다른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제조지시기록서 또는 품질관리기록서, 시험성적서 등의 고의적인 허위작성 및 미작성 △제조관리자 등의 업무외 종사 및 불종사 △GMP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은폐, 폐기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 △기타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불법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의심사례 등의 불법행위를 접수받고 있다.



3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개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신고 필요성

공익신고 왜 하는 걸까?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침해,
우리 사회 신뢰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

공익신고 왜 중요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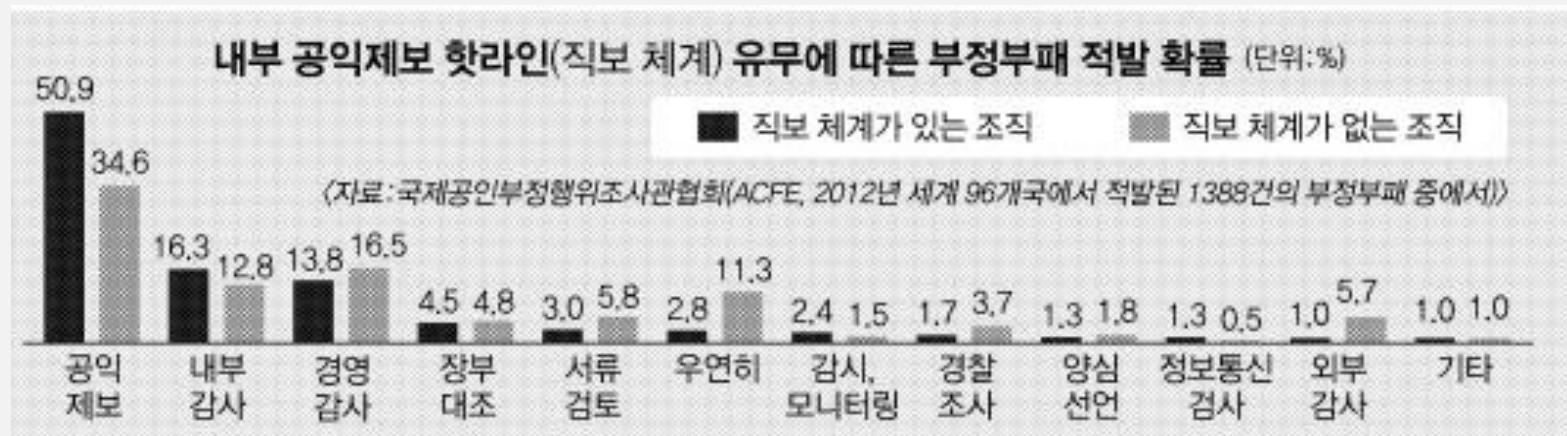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지?

공익신고 현황

내부 공익신고는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의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 부패신고 이첩 사건 : 총 3,279건 (2002~2020)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백서
- 내부신고 : 총 1,774건 (54.1%)
- 내부신고 부패혐의 적발 : 1,557건 (혐의적발률 74.3%)
- 3,557명의 기소/징계 처분
- 내부신고로 인한 추정·환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 : 6,963억여원 (전체의 81.4%)



신고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필요성



● REC

실험설계/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

구조대
(수직강하식)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필요성

- » 의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 » 일반적으로 의리라고 하면 한 번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잘 유지하는 것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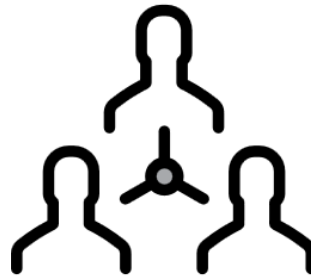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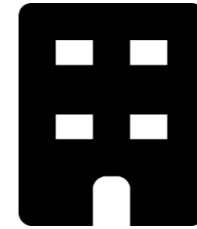
» 의리가 지켜지는 범위



향응을 제공받거나
혜택을 입은 친척



지인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

» 의리의 양면성 – 단합 vs. 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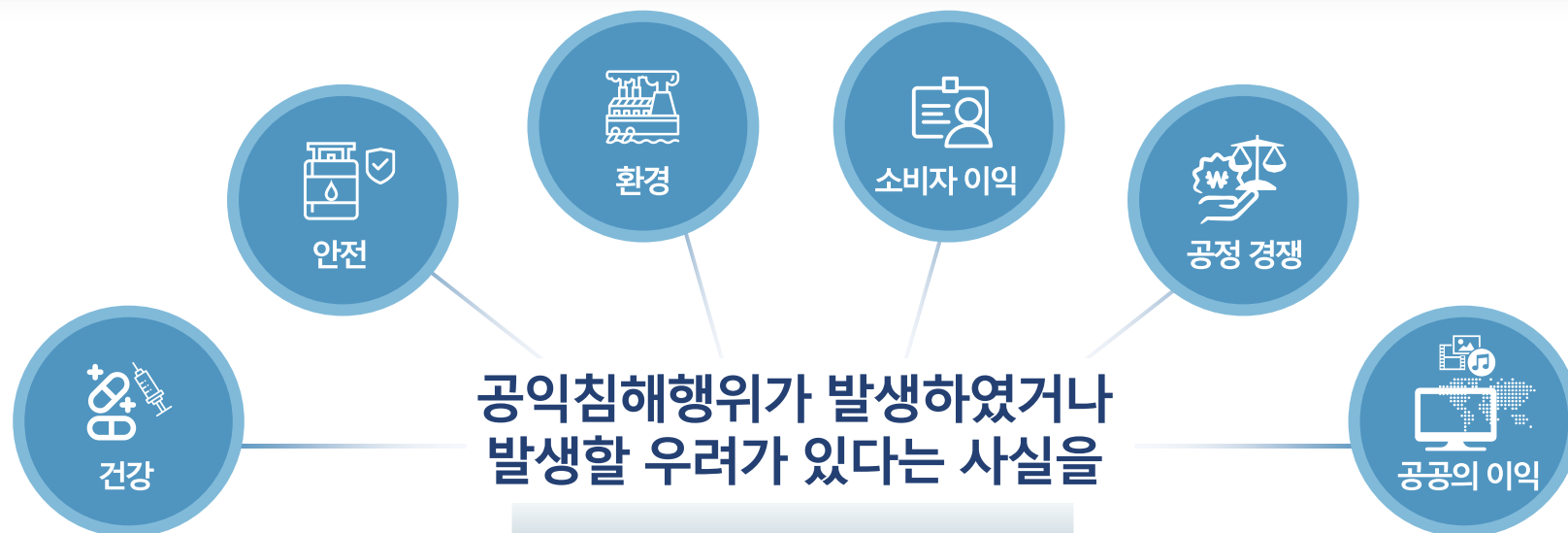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옳은 길’

vs.

이전에 밀약했던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



공익신고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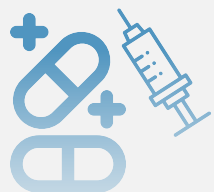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개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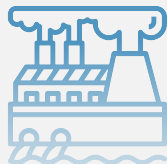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소비자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공정 경쟁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 4월 20일 시행 추가법률 (4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주체, 신고기관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누구든지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국회의원

❖ 각 신고기관별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운영 필요

공익신고 방법

문서 신고

전자문서 포함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

문서신고는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 우편, FAX
전화는 상담만 가능

공익신고서 기재사항

-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 공익침해행위 내용
- ✓ 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구술 신고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

공익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적은 후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공익신고자에게 읽어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함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임장이 반드시 제출
위임장이 없다면 대리 신고로
인정받을 수 없고, 본래의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 등 추후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음

공익신고자의 개념

공익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협조자)

- ① 공익신고자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 ② 공익신고자 등 -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외부 공익신고자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

내부 공익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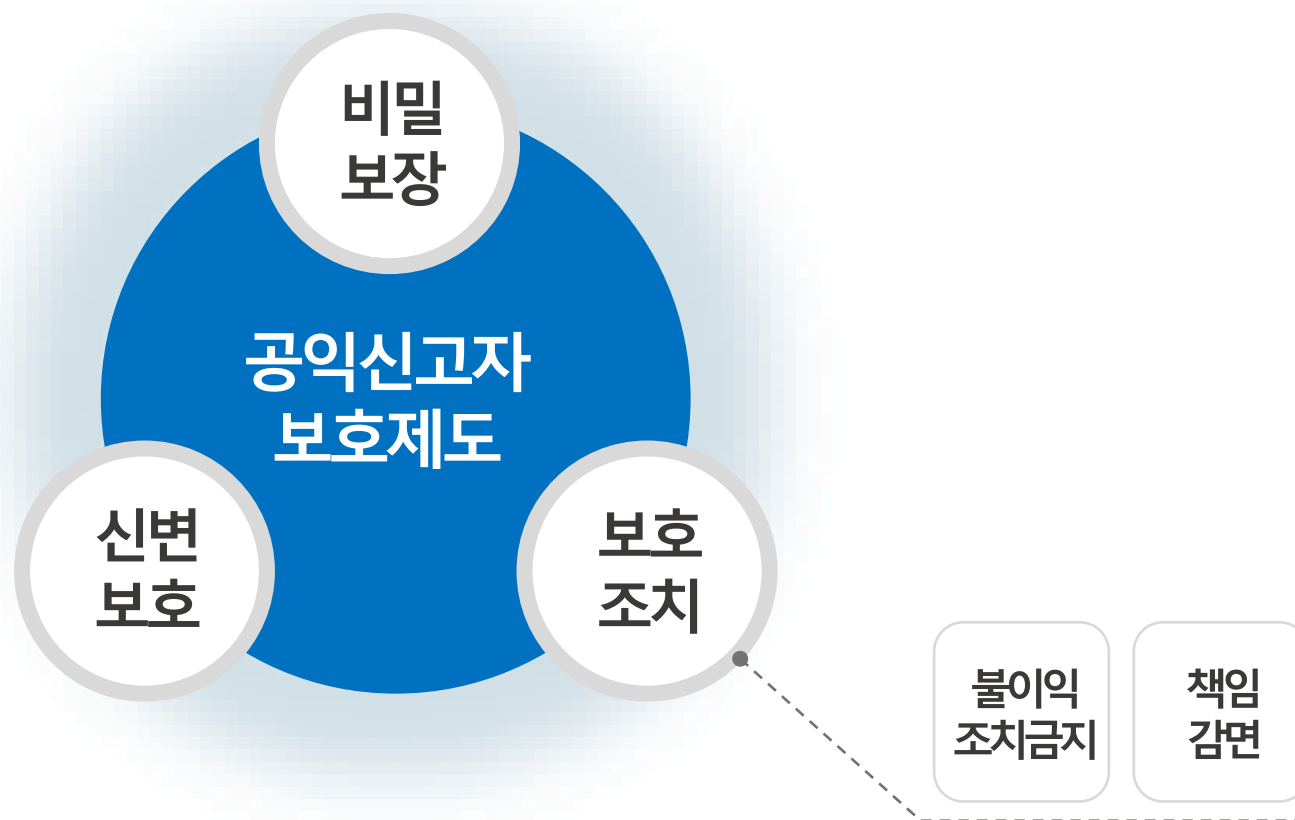
(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의2)

- ①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
 - ②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와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
 - ③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 **교육·훈련**
 - ④ 피신고자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 ⑤ 피신고자(기업, 법인) **계열회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 ⑥ 그 밖에 피신고자의 지도·관리·감독 받는 자로서, 불이익조치 받을 수 있는 자
-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
 - 조직 스스로 사전 예방적·자율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저비용·고효율의 통제수단**
 - **보상금 지급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 비공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공익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신고의 경우 '20. 6. 11.부터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제재)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신고 방해·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항]

-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 조치 유형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 신 변 보호요청

부패·공익신고자 등



신변보호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조치 요청

경찰관서의 장



➤ 신 보 호 방 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책임감면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 | | |
|--------------------|---|
| ➤ 형의 감경·면제 |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 ➤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 부패·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보상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



구조금

공익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치료, 이사,
쟁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약 바이오 업계, 청렴도 향상

ISO 37001 도입 효과, 높은 청렴지수로 입증 - 한국투명성기구

◇청렴이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생각 변화가 일어난 이유 (단위:%)

구 분	도입	도입중	미도입
대표이사의 반부패 청렴의지	26.1	55.9	33.3
임원 및 간부의 반부패 태도 변화	8.8	3.4	8.9
동료 직원의 반부패 태도 변화	12.9	3.4	2.2
교육, 리스크 평가 등 ISO프로그램 참가	27.8	22	6.7
사회적 반부패 분위기 확산	10.4	13.6	46.7
기타	1.1	1.7	2.2

제약바이오산업 ISO 37001 인증사업 도입 효과 분석 연구

- △ 반부패 윤리문화(업무의 투명한 처리, 청탁 등) △ 부패방지 제도(부패 행위 신고제도 등)
△ 내·외부 업무 청렴(인사, 금품수수 등) △ 윤리경영 리더십(최고경영자의 노력 등)
- **ISO 37001 도입 완료한 기업들의 청렴도 - 4.34점 (5점만점)**
- ISO 37001 도입 중인 기업들의 청렴도 - 4.29점
- ISO 37001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청렴도 - 3.89점

기업의 윤리지수와 수익률의 관계

윤리적인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의 윤리지수 추이

ETHISPHERE
GOOD. SMART. BUSINESS. PROFIT.

FIVE-YEAR ETHICS PREMIUM: 7.1%

According to Ethisphere's Ethics Index, the listed 2021 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honorees outperformed a comparable index of large cap companies by 7.1 percentage points from January 2016 to January 2021.

● 2021 ETHICS INDEX
● LARGE CAP INDEX



올해 세계의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지정 받은 상장기업의 총합 지수인 에티스피어의 2021년 윤리 지수가 대형주 기업들의 지수를 지난 5년 보다 **7.1퍼센티지 포인트**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인의 책무

“

내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배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식인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재승의 '과학의 눈으로 본 배신의 정체성' 중, 한겨레출판 <배신> 2008년